

민주당 주도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민주당 11명, 비교섭단체 4명 찬성
與 정무위원, 국회 소통관 찾아
“거대야당 입법독주 폐해 심각”
野, 법률안 처리 필요성 강조

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야당 위원들의 주도로 여당이 반대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60일이 흘러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 표결을 받아 본회의에 바로 회부됐다.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 비교섭단체 위원 4명(김종민·새로운미래·양정숙·개혁신당·황운하·조국혁신당·강성희·진보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이에 응할 의무를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자들에 대한 명예회



김한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다.

본회의 직회부 직후 여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거대야당의 입법 독주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민국 정무위 여당 측 간사는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입만 떠벌 거찰독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입법독재야 말로 민주주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출신인 최승재 국민

의힘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오랜 기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가맹사업법관련해선 토론도 없었다”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수많은 단체를 양산할 수 있다. 업종별 단체들이 이미 사단법인화 돼 있고, 수많은 단체들이 극도의 혼란이 벌어지고 어용단체도 만들어지고 있다. 숙려기간과 논의가 필요한 데다 수석전문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강민국 간사는 “가맹사업법의 문제점은 3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 시 단체 구성이 가능하게 하면, 편의점은 300개가 넘는 가맹점사업자가 난립한다”면서 “이들이 가맹본부하고 (각각) 협상하면 어떻게 기업이 존립하나. 절차와 내용상의 흠결이 있는 오직 민주당의 힘자랑이며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정쟁에 매몰된 법안”이라고 평했다.

강 간사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마찬가지로”라며 “절차적이며 내용적인 면에서 민주유공자법이 아니고 반민주유공자법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찬성표를 던진 야당 의원도 소통관을 찾아 법률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도록 돕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영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등 자영업자의 상생 협상권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민주화 보상법’을 만들어 보상했지만, 이 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하고, 일회성 보상과 복직, 사면 조치 정도만 했을 뿐, 온전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라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중진 “비대위원장, 최소 4선 이상 원내인사 추천”

윤재옥 원내대표, 중진의원 간담회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 치를 생각”
내달 3일 이전 선임 마무리 전망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조속히 치르기 위한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릴 전망이다. 당 지도부를 빠르게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중진의원 간담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를 포함해 배준영 사무총장 권한대행, 정희용 수석대변인, 김상훈·박덕흠·권성동·이양수·조경태·김기현·주호영·권영세 의원과 나경원·조배숙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모인 중진의원들은 윤 권한대행에게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적어도 4선 이상의 원내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전날 열린 국민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힘 당선자 총회에서 관리형 비대위를 통해 조속히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낙선자들 중심으로는 혁신형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도 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중진의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 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리더십이 빨리 정상화돼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된다’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어제

당선자 총회와 동일하게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로 구성돼야 한다”며 “그리고 윤재옥(당대표) 권한대행이(비대위원장) 다양하게 찾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됐고 다양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임명 시기는 확정해 말할 수 없지만, 전국위원회도

열어야 하므로 최대한 서두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중진의원들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한 후보군’에 대해서는 “5선 이상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좋다고 한 분도 계셨고, 4선 이상에서도 좋다고 하신 분도 계셨다”면서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자는 “전대는 빠르게 치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면서 “많은 분들이 윤재옥 권한대행이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렸으나, 윤 권한대행이 고사했다”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5선 이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당 대표는 이르면 6월 선출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의힘 비대위는 혁신형 비대위가 아닌 관리형 비대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당이 안정된 후에 총선 참패의 원인을 찾고 쇄신을 하겠다는 뜻

으로 보인다.

이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시점인 5월 3일 이전에 새 비대위원장 선임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해 전국위원회 회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린단 계획이다. 그리고 전당대회는 6월쯤 치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이들은 잠재적 당권주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새로 지도부를 꾸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많다.

특히 당선자들과 중진의원들은 잠재적 당권주자로 꼽힌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혁신은 제대로 된 전당대회에서 뽑힌 정식 지도부가 하고, 지금은 유일하게 남은 게 사실 전당대회 톨”이라며 “지금 100% 당심으로 뽑지 않느냐. 이번에 다시 최소한 예전처럼 ‘당심 70% 민심 30%’로 복원, 또는 한걸음 더 나아가 간다면 지금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처럼 5대5도 가능하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조국혁신당, ‘민주당-민주연합 합당’에 교섭단체 구성 난항

지위 얻으려면 8명 의원 더 필요
합당으로 민주당 몫 인사 빠져나가

22대 국회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이 의원 20명이 모이면 만들 수 있는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당 수순을 밟으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국혁신당의 제1과제는 제22대 국회

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해 존재감을 더 높이는 것이다. 조국 대표도 인터뷰 등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선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단 2개였다. 교섭단체는 상임위원회에서 실무와 협의를 담당하는 간사를 파견할 수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켰고, 교섭단체 지위를 얻으려면 8명의 의원이 더 필요하다.

문제는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합당 논의에 착수하면서 민주연합 내 민주당 몫 인사들이 빠져나가면서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난항을 겪을 예정이라는 점이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를 이루기 위해서 민주연합의 군소정당, 시민사회 몫의 당선인과 군소정당의 당선인을 설득해야 한다.

조국 대표는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섭단체 추진에 대해 “저희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 수 채워서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 대표는 “제도 개선을 통해 20석 미만도 원내교섭단체가 되거나 공동교섭단체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돼도 조국혁신당이 할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현재 의원 20명인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으나 여당의 반대가 예상돼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기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교섭단체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원내교섭단체 자체가 가진 권한이 강하다 보니까 원내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이 사실상 똑같은 300명의 의원인데,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자꾸 의사결정과정에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추진에 대해선 “의원을 꺾는다든지 의도적으로 뭘 맞춰줘서 한다는 것은 도리어 잘못하면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며 “우호적인 교섭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약간 꼼수로 보이지 않겠느냐.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